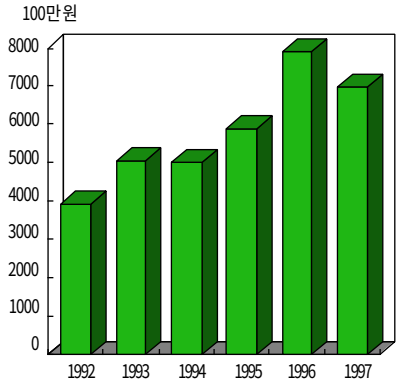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특정물질을 둘러싼 의혹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생산 및 사용규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의 대체물질을 상업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판매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에서는 지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로는 고가의 신물질을 판매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들어서야 CFC, HC FC, Hallon 등 지구온난화 관련물질 소비를 확대하고 있을 뿐 20-30년 전에는 이들 물질 소비가 얼마되지 않아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엘리뇨에 이어 라니냐로 이어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온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이니 이를 마냥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으니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관련부서나 관련업계 모두가 지구온난화 대체물질 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고 수익화시키는데 노력하기는 커녕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수출입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책적인 오류 및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특정물질 배정 및 생산·수입량 결정과정이 베일에 가려있어 산업자원부 화학생물과 및 정밀화학진흥회 그리고 심의위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산출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특정물질 사용량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고, 생산 및 수입량을 배정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을 몇몇 인사들이 탁상에 앉아 나눠먹기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둘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운용 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정물질이나 관련 기자재 개발기업에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고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용상태는 전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기금 운용규모가 340억여원 으로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특정기업 및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돼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셋째, 산자부가 특정물질 생산기업을 과보호한 나머지 수요처를 외면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산자부와 정밀화학진흥회가 울산화학과 후성테크(구 석수화학), 한주케미칼과 유착돼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물질 사용량 및 생산·수입량 배정, 판매단가 고가책정문제가 그러하다. 울산화학에서 생산해 후성테크가 판매하고 있는 C FC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고, 공급량 배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할론은 생산이 원활치 못하고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소화기 수입시의 할론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국내 할론 소화기 메이커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넷째, 한국종합화학과 울산화학이 합작한 한국신화의 매각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몇몇 담당자들 손에 의해 결정, 매각액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렸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매각과정을 공개하고 공정하게 재심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4가지 의혹들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물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정물질을 둘러싼 기업-관료 유착 및 형평성 상실, 기금운용 의혹문제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화학저널 1999/3/15>